

광주 '수소차 메카'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오전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열린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을 마친 뒤 센터 내 '자동차 창업 아이디어 존'을 둘러보고 있다. 왼쪽부터 정몽구 현대차 회장, 박 대통령, 윤장현 광주시장, 이성안 광주과학기술원 학생, 유기호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장. /광주전남사진기자단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 ... 현대차그룹과 1775억원 규모 기금 조성

박대통령 "수소차 산업 생태계 조성·서민주도형 창조경제 모델" 현대차그룹, 시설 신축 등 구체 계획 빠져 ... 통 큰 투자 이뤄져야

현대차그룹과 광주시, 정부가 27일 출범한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광주는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메카로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2·3면>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광주시 오룡동에서 열린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창조센터) 출범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곳 지명이 오룡동(五龍洞)으로 하늘로 승천하는 다섯 마리의 용이 자리를 잡은 곳"이라며 "앞으로 광주를 '자동차산업 창업의 포털'로 발전시키고, 대한민국을 '수소경제의 리더'로 도약시킬 많은 용들이 이

곳 혁신센터에서 탄생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수소차 분야와 관련, "세계에서 유일하게 수소차 양산능력을 갖춘 현대자동차와 수소충전소나 연구기관 등 수소 인프라가 잘 마련된 광주가 힘을 모아 수소 생산과 충전, 전기발전, 그리고 수소차를 연결시키는 융합 스테이션을 만들고 이를 토대로 수소차 산업의 생태계를 광주에 조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주 창조센터는 광주에 공장이 있는 현대자동차그룹이 전담지원을 맡아 자동차 산업 창업 중심지 및 수소차 연관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소상공인·시장상인·지역주민 등 서민주도형 창조경제 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출범했다.

이를 위해 자동차 창업과 연관 생태계 조성에 투·융자 자금 1675억원이 지원되며, 전국 최초로 '서민생활 창조경제' 기금(100억원)도 조성될 예정이다.

■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1센터 광주과학기술원 (자동차 분야 집중) 수소차 연료전지 산업지원

2센터 양동 KDB빌딩 (서민 생활 지원사업) 소상공인·문화·예술 창업보육 등 지원

이날 행사에는 윤장현 광주시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미래·범부·산업부장관, 지역 국회의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조경제 관련 64개 기관이 참여하는 12건의 양해각서(MOU)도 체결됐다.

박 대통령은 또 "광주는 어머니 산이라 불리는 무등산 정기를 받아 등급없이 더불어 사는 '무등(無等)'의 공동체정신을 가꾸며 살아온 곳"이라며 "광주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한 대기업과 상생해 광주의 '무등정신'을 창조경제에 접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광주 창조센터가 중심이 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시장상인, 지역주민 등 지역 공동체 곳곳에 창조경제가 스며들게 만들 것"이라며 ▲시장상

인 등에 대한 디자인 도입 및 마케팅 지원 ▲문화와 산업을 융합한 체험산업이나 테마마을 조성 같은 마을 특화사업 추진 등을 약속했다.

박 대통령이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에 참석한 것은 지난해 9월15일 대구(삼성), 10월10일 대전(SK), 11월24일 전북(효성), 12월17일 경북(삼성 및 포스코)에 이어 다섯 번째다. 광주 방문은 취임 첫해인 2013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과 지난해 12월3일 대한민국 지역희망 박람회 참석에 이어 세 번째다.

하지만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다른 지역 창조센터 출범 때와 달리 관련 시설 신축 등 구체적인 투자 계획이 빠진데다 수소차 사업 연구·기술개발·창업 등을 육성한다는 등의 원론적인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대차그룹이 이날 밝힌 광주 창조센터 출범 이후 세부 프로그램도 자동차분야 창업 생태계 조성, 산학연 수소차 연관산업 육성 및 기반 조성, 창업보육 지원 등만 나열했을 뿐 구체적인 투자규모 등은 제시되지 않았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F1' 박준영 前지사 등 고발

시민단체 "막대한 재정 손실 책임자 처벌" 요구

시민단체가 '돈 먹는 하마'라는 비판을 받은 F1(포플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와 관련,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관련기사 2면> 수천억원이 넘는 세금을 투입하고도 한 차례 대회로만 600억원이 넘는 적자를 내는 등 무리한 대회 추진으로 지방 재정 악화를 불러온데 따른 책임을 묻겠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광주일보 12·13일자 1면, 14일자 2면 보도>

시민단체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밝은 세상)은 26일 박준영 전 전남지사(당시 F1 대회 조직위원장), 윤진보 전 F1 대회 지원본부장, 이근경 전 전남도 정부부지사 등 F1 대회 핵심 추진 주체 등 10여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 대상에는 대회지원본부와 조직

위원회 운영본부장, 사무총장, 집행위원장 등이 모두 포함됐다.

'밝은 세상'은 "2010년 첫 대회 후 2013년까지 운영비용으로만 모두 1900여억원의 적자가 누적됐다"면서 "대회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정손실을 초래한 추진 주체들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밝은 세상'은 대회 유치 및 추진 과정에서 지분구조 개편, 주주간 협약 변경, 개최권료 납입 등도 남용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F1을 추진한 주체들은 법령에 정한 절차를 지키고 재산상 손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정부 부처의 판단도 무시한 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데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서대전역 경유 '저속철' 논란 호남선 KTX 개통 4월로 연기

국토부 "최대한 빨리 확정"

호남고속철도(오송~광주승정) 개통 시기가 애초 발표된 3월에서 4월로 다소 늦춰진다.

여형구 국토부 2차관은 개통 시점에 대해 "4월초가 될 것"이라고 27일 말했다. 앞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 15일 호남고속철도 시승 행사에서 개통 시기를 3월로 밝힌 바 있다. 여 차관은 "3월 말쯤 개통하려고 했는데 조금 늦어진 것이다. 개통을 준비하다 보면 시차는 생길 수 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광주시도 "각 기관별 일정 조율 때문에 3월말로 예정됐던 개통식이 4월 1일로 연기된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부 KTX가 서대전역을 경유하면 익산까지 기존선을 저속운행하느라 45분이 더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광주·전남·전북과 대전이 대립하는 것이 개통 지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코레일은 호남선·전라선의 KTX를 주말 기준 하루 62편에서 82편으로 늘리고 이 가운데 18편(22%)은 서대전역을 경유하는 내용의 운행계획을 국토부에 낸 상태다.

여 차관은 "최대한 빨리 운행계획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서대전역 경유 문제를 다음달 초까지는 매듭지으려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차역 문제는 지자체와 열심히 협의 중"이라며 "호남고속철도의 도입 취지를 존중하면서 이런(서대전역 경유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코레일이 제출한 운행계획보다 서대전역 경유 편수를 다소 줄일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돼 결과가 주목된다.

/박진표기자 lucky@연합뉴스

광복 70년 3·1마라톤 50년 60년 호남예술제
광주일보가 함께 합니다

광신대학교
학부 편입 062)605-1114
신학과, 국제한국어교원학과, 음악학과, 사회복지상담학과, 유아교육과
신학대학원 편입 062)605-1115
원서접수 1. 26(월) ~ 2. 2(월)

도장·도금 공장 매각 및 임대

공장부지 18,549평 · 건물 3,000평

소재지 전라남도 해남군 문내면 예매리 1241-74
현황 아연도금 현허, 태양광발전사업 허가(1메가)
토지면적 61,321㎡(18,549평)
공장면적 10,000㎡(3,025평) (아연도금 공장 1,000평, 도장공장 2,000평)
물류면적 51,674㎡(15,631평)
보유설비 산처리/도금 설비, 환경설비, 표면처리 설비, 크레인 설비, 전기 950kw

매각 또는 임대 협의 가능
송학부동산 (062)710-7007
담당자 010-6318-9611